

월요객석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세이프가드와 혁신성장

미국무역대표부는 수입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자국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수입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확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할 때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다. 1월 22일 발동한 세이프가드 대상에는 태양광 전지와 모듈과 함께 국내 가전사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 물량도 포함되었다.

태양광 모듈을 중심으로 첫 해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매년 5%씩 관세가 줄면서 4년 간 부과된다. 미국 태양광 전지와 모듈 생산기업을 보호할 명목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미국 제조업 육성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미국 태양광 시장을 위축시킬 것은 확실하다. 관세의 부과로 태양광 설비투자비가 상승하면 발전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우선시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모순되게 미국 태양광 산업의 고용도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2010년 850MW에 불과했던 태양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2016년 15GW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7년에도 약 12GW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미국 태양광 산업의 고용은 2016년 26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미국 태양광 산업의 일자리가 주로 시공 분야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시장의 위축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는 미국에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말레이시아산 다음으로 한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이 미국에 많이 수출되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이 한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9억 5천만 달러 수입했다. 미국 시장 축소에 따라서 한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출 규모도 10~3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16년 태양광 제조업의 수출액은 약 2조 9천억원이고 미국 시장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태양광 산업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축이다. 2016년 태양광 산업은 전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매출액의 70%, 수출액의 81%, 투자액의 81%를 차지하였다.

풍력산업이 타워, 베어링, 단조부품 등 부품산업 외에는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고 있지 못하는 상황과 달리 태양광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폴리실리콘 제조에서 OCI와 한화케미칼, 웨이퍼에서 웅진에너지, 전지와 모듈에서 한화솔루션과 LG전자 등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영향에 아랑곳없이 세계 태양광 시장은 2017년 잠정치 98GW보다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0GW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한 축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은 미국 시장 축소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고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조사들도 지역다변화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축소의 영향을 상쇄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장은 인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다양하지만 국내 시장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약 1,200MW로 추정되는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올해는 국내 태양광 시장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확대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이 점유율을 높이려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개선하는 자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국산 태양광 제품을 우대하는 지혜로운 보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겠지만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의 연계 부분이 더 보완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확대를 통해 어떻게 자국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육성할 지는 독일, 일본, 미국 등 기술 선진국들의 공통 관심사이다. 국제 무역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나 중국의 로컬콘텐츠 조항은 다른 기술 선진국들도 초강대국이라면 휘두르고 싶은 것이다.

보급과 산업 육성의 연계는 지난 15년 간 재생에너지 정책 분야의 풀기 힘든 난제였지만 국민의 동의 기초로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시점에서는 더욱 확실한 진전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혁신성장에 기여하려면 이번 정부에서는 새로운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이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社 說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종 상황 고려해야

발전정비 시장의 신규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도입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로 시행이 잠정 연기됐다. 정부는 한전KPS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민간정비업체의 수행물량 전체를 시장에 환원하는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전정비를 하는 대부분의 작업자가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사업장 직원의 정규직화에 해당되면서 발전정비산업 경쟁 확대 계획도 잠정 유보됐다.

당초 정부는 과건과 용역에 한해서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고 경쟁정비와 계획외발전비의 경우 공사인 탓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인력이 입찰결과에 따라 인력이 소속만 바뀔 뿐 상시적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의 특성상 전력산업은 국가 중요시설을 다루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대규모 장치산업이다 보니 협력업체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전정비 시장이 그렇고 또 전기사용량을 확인하는 검침인원들도 한전의 업무를 대행하는 분야다.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회사의 상호만 바뀔 뿐 상시 같은 업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해당 분야에선 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보기에는 직장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 지난해 본격 논의된 내용들이 올해 실행에 들어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더욱 불거질게 뻔한데,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해당기업의 업무의 특성 또 관련 분야의 일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 많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찍부터 명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설 연휴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설 연휴에는 두둑한 보너스를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대부족의 직장인들은 연휴도 못 즐기고 두둑한 보너스는 남의 나라 얘기가 될 수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니 조사대상 기업 중 51.2%의 기업이 상요금을 지급한다라고 답한 반면 49%는 지급계획이 없다고 했다. 상여금도 '대기업'(142만 원), '중견기업'(133만 원), '중소기업'(71만 원)의 순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수준이었다. 설 연휴도 그렇다. 설 연휴 동안 운수노동자 5명 중 4명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합원 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운수노동자의 77.7%는 연휴 중 하루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33%나 됐다. 또 설 연휴에 일을 해도 할 중 수당을 적용받는 운수노동자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조합은 "연휴 기간 중 사고를 줄이려면 총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급여도 높지 않으며, 근로시간은 긴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우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산책

지난해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던 가상화폐는 최근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적인 비트코인은 지난해까지 무서울 정도의 상승세가 무색할 정도로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만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6000달러(6일 기준)도 붕괴했으며, 두달도 채 안된 시간 사이에 2000억달러(한화 약 217조6000억 원)가 증발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일 경우 비트코인의 시총은 1090억달러(한화 약 118조 원) 정도가 된다. 이는 전체 가상화폐 시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1년전까지만 해도 전체 가상화폐 시총의 85%를 차지했었다.

가상화폐는 최근 서민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까지 불리며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상화폐 수익률을 공개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등 지난해 최고의 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가상화폐 투자

미국 투자인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내재적 가치의 부재로 인해 거래가 끊기면서 0달러까지 내려앉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가치가 20~30% 가량 변동하기 때문에 가져치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날개없는 추락, 가상화폐

위험성을 경고하고 규제하는 등 분위기는 점차 반전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가상화폐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었던 탓에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일본 거래소 해킹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적절한 규제라는 평가도 뒤늦게 나오고 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야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도 최근 가상화폐를 폰지사기로 규정했다.

폰지사가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과연 서민들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윤대원 기자 ydw@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가50118
사장·발행인 이형주	편집인 이용우	편집국장 유희덕	인쇄처 문희일보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동촌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 장 실 (02)2168-1301~2	광고마케팅팀 (02)2168-1351~7	광고문의 (02)2168-1351~7	
부 사 장 실 (02)2168-1303~4	FAX 2168-1349	FAX 2168-1349	
편 집 팀 (02)2168-1312~5	경영지원팀 (02)2168-1306~8	구독문의 (02)2168-1306~8	
에너지 Biz팀 (02)2168-1320~4	FAX 2168-1349	FAX 2168-1349	
산 업 팀 (02)2168-1330~4	사 업 팀 (02)2168-1360~1	본사 외국제휴사	
디지털뉴스팀 (02)2168-1340~2	FAX 2168-1349	중국전력보(중국), 베트남전기리뷰(베트남)	
FAX 2168-1349		전기저널(미국), 동광 E&E 저널	
매주 월·수·금요일 발행 구독료 월 15,000원 연 18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견적, 적산 시스템은 아성정보 COST로 앞서 나가십시오.”

전기적산통합(전기, 통신, 소방) CAD·과일도면 물량적산까지

- 국내최초 특허출원 적산프로그램, 획기적인 AutoCAD파일 도면물량적산까지
- 관급, 사급, 설계업체에서 시공업체까지 건설관련 전업종에서 사용가능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조,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 인테리어, 시설물 등)
- 정부(조달청)인증소프트웨어로 적산과 동시에 내역지동작성
- 최신 자재단가, 임원대가, 정부노임, 품셈, 실적공사비등 자료 제공
- 이성정보 홈페이지->자료실->사용설명서에서 동영상설명서 참고하세요

통합내역 / 전기적산 / 설비적산 / 골조적산 / 마감적산 / 노무관리

★ 아성정보 (株) ■ 문의전화: (053)751-6715 ■ 팩스: (053)753-5015 ■ 홈페이지: www.asungsoft.co.kr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합병) 전문기업

기업인수·합병 전문기업 보은 M&A에 믿고 맡기십시오!

1. 신규등록 및 법인분할, 합병, 양도양수업무
2.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3. 전기공사업 신규 3년경과후 등록기준신고
4. 법인설립 및 기업진단 업무
5. 자본금 증자 및 공제조합 출자 상담
6. 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및 면허반납
7. 한전 배전 단가 실적업체 업무상담
8. 한전 송전 실적업체 업무상담 (복도체, 4도체, 6도체)
9. 철도 신호 및 전차선 실적업체 업무상담

(주)보은M&A TEL 02-3482-3304
 www.boeunmna.com FAX 02-6944-9104
 H. P 010-4372-2266

www.electimes.com

창간 54년의 신뢰와 명성! 동종업계 최대부수와 인지도!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전기신문